

국 제 법

2014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A국은 C국의 오랜 식민지배로부터 1995년에 독립하였다. C국은 1985년에 인접한 B국과 조약(1985년 조약)을 체결하면서, C국과 B국 사이의 국경분쟁이 있었던 X지역에 대한 B국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A국은 독립 후 1985년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X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군사력이 우세한 A국은 무력행사를 통해서라도 X지역을 되찾기로 결정하였다. A국은 2010년 1월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는 한편, B국의 주요 항구를 모두 봉쇄하여 해상 교통로를 차단하였다. 이어 X지역이 A국령임을 인정하는 조문을 포함하여 A국과 B국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조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A국의 군사적 시위에 굴복한 B국은 2010년 3월 A국이 요구하는 내용 그대로 조약(2010년 조약)을 체결하였다. A국은 1995년에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년 조약법 협약)”에 가입하였고, B국은 1969년 조약법 협약의 원당사국이다. (총 40점)

- 1) B국과 C국이 체결한 1985년 조약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A국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20점)
- 2) B국은 2010년 조약 중 X지역에 관한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머지 조항을 유지하기 원한다. 이러한 B국의 입장을 국제법적으로 평가하시오. (20점)

제 2 문. 인접하고 있는 A국과 B국은 역사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이다. A국의 대통령은 최근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1개 연대 병력을 B국에 파병하는 명령을 내렸고, 이 부대는 작전수행과정에서 약 3,000명의 B국 민간인을 살해하였다. A국이 민간인의 살해에 대하여 그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A국의 대통령을 살해의 책임자로 보고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회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한편, B국은 A국의 무력사용 및 민간인 살해행위에 대하여 A국의 국가책임을 추궁하고자 하였으나, A국은 이에 대한 일체의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A국과 B국 사이의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 회부하여 해결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위 사안에서 ICC 및 ICJ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단, 유엔 회원국인 A국과 B국은 ICC 규정의 비당사국이다) (30점)

제 3 문. 반도국가 A와 대륙국가 B는 300해리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마주 보고 있고, 도서국가 C는 A국으로부터 300해리 정도 떨어져 있다. A국과 B국 사이의 바다 깊이는 평균 100미터이며, A국 연안 쪽이 B국 연안 쪽보다 약간 더 깊다. A국과 C국 사이의 바다 깊이는 평균 500미터이며, C국 연안 쪽에 수심 3,000미터에 달하는 해구가 위치해 있다. A국은 B국 및 C국과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대륙붕 경계선을 확정하는 외교협상을 준비 중이다. A국이 양국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국제법상 경계획정 원칙과 방법들을 검토한 후, 해양영역 확보와 관련하여 A국이 B국과 C국 각각에 대하여 견지할 입장과 논거를 제시하시오. (30점)

안전행정부 시험출제과장

